

도 탄소산업 활성화 기대

발전위 중간보고회에서 8개 정책과제 발표... 국·도정 시책 반영 추진

전북도는 5일 '전라북도탄소산업발전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산하 4개 실무협의회에서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발굴한 총 8개의 정책과제에 대한 점검을 하기 위해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는 유희숙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을 비롯 국내 탄소기업, 연구기관, 학계 등 관련 전문가 20여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는 위원회 산하 4개분과(탄소정책·탄소융복합·탄소소재산업·탄소나노분과)에서 약 6개월에 걸쳐 발굴해 낸 정책과제를 발표, 발굴과제의 실현가능성 및 국가정책화 방안 등을 모색하는 중간보고회로 진행됐다.

이들 4개 분과는 그동안 분야별로 전북 탄소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큰

틀의 정책과제 발굴 및 기획을 위해 매월 두세 차례의 기획회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총 8개의 정책과제를 발굴, 이번 위원회를 통해 기본방향과 대략적인 내용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각 분과는 발굴과제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 보다 구체적인 기획작업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주요 과제들로는 기간 꾸준히 제기되어 온 탄소산업 생태계 촉진, 탄소기업 지원 방안, 인력 양성 등의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탄소법 제정, 대통령 공약반영으로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이므로, 탄소산업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많은 아이디어

를 찾아 내고 정부에 제공해서 최대한 국가정책화를 도모해야 한다"라며 탄소산업발전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도 탄소산업과 관계자는 "실무협의회에서 발굴한 이번 정책과제 중 일부과제들은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기 때문에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내용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하반기에는 관련 데이터와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완성도를 최대한 높혀나갈 계획이며, 정책과제의 추가 발굴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탄소융복합분과에서 발굴해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한 '탄소기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심의도 함께 진행했다. /김진성 기자



군산조선소 기동중단 애로사항 현장점검 5일 오후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를 찾는 조선업 관련 부처(총리실, 산업부, 기재부, 고용부, 중소기업, 금융위 등) 실무진이 조선업체 대표와 소상공인 등으로 부터 군산조선소 기동중단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피서철 바다정화 힘 쏟는다

총 19억9100만원 투입 2035톤 쓰레기 수거기로

전북도는 2017 전북방문의 해와 하절기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 및 고군산군도 주변 관광지, 도서 벽지 해안가 등에 방치된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해 올해 5개 사업에 19억9100만원을 투입, 2,035톤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행했던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비를 전년보다 2억원 증액한 9억원을 확보해 도서 벽지 바닷가에 방치된 폐어구 및 폐스티로폼 부표 등 해안가 쓰레기와 침적 폐기물을 중점적으로 수거·처리하여 쾌적한 바다환경개선 및 수산자원보호를 추진한다.

또한, 장미철 및 집중호우기에 강과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각종 쓰레기 처리를 위해 2억원을 투입, 군산 금강하구 인접해역에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쓰레기의 재투기를 예방하고 해양 정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어로 활동 중에 인양한 폐그물 등 쓰레기 수매에 6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연안 어장환경개선의 중요성 인식제고도 추진한다.

특히, 조류에 의해 해안가에 집중되는 쓰레기 처리를 목적으로 해당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삼탄농정 수산분과위원회에서 새롭게 발굴한 어촌마을 환경정비 시범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신시도~무녀도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부분 개통지역 등 상시 쓰레기 집중지역에 시범 추진하며, 지역민의 참여도 제고 등 가시적인 성과에 따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연안 어장 및 주변해역의 공유수면 해저의 각종 오염물 수거 및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구제를 위해 어장정

화선단 운영비 2억원을 투입해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과 수산자원보호증진을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도서 및 어촌지역에 방목객이 증가하면서 각종 쓰레기가 산재한 지역은 적극적인 행정 계도를 통해 쓰레기 퇴거요구, 재활용 분리수거, 쓰레기 종량제 등 사전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에도 전념할 방침이다.

전북도 김대근 해양수산과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바다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해양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유관기관, 지역민 및 정화활동 참여 확대와 더불어 쓰레기 불법투기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인식의 재전환"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丁의장, 예결위 회부할까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는 6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 직권 회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정 의장은 6일 오후 1시30분을 추경안 심사기일로 지정할 바 있다. 정

의장은 심사기일을 지정해 이날까지 예비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임위 소관 추경안을 예결위에 회부할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추경 관련 상임위 13곳 중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5곳은 추경 예비심사가 공전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5일 뉴시스와 전화 통화에서 "정 의장이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회법에 따라

추경안을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6일 예결위에 회부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국회법 84조6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 심사기일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가 이유 없이 그 기간에 심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다. /뉴시스

전국 정보화 마을 지도자 한자리

우수마을 성공사례 발표·유공자 포상 등 행사

경북 의성 청학정보마을처럼 정보화를 통해 품격을 높인 '명품 정보화마을'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행정자치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공동으로 5일~6일 전북 부안군 대명리조트 변산 컨벤션홀에서 '제15회 전국 정보화 마을 지도자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15회 째를 맞는 전국 지도자 대회는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과 함께 우수사례 공유, 전문가 특강 등 정보화마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정보화마을은 2001년부터 조성된

행정자치부의 대표적인 IT인프라 사업으로 그간 정보화에 소외된 농산어촌 지역의 정보격차 해소에 앞장서 왔다.

또한 현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전국에 337개 마을이 운영된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마을 대표 등 총 53명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44점) ▲개발원장상(9점)을 수상했다.

먼저 2016년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의 대상은 경북 의성 청학마을에 돌아갔다. /김진성 기자

또한 경북 상주 은자골마을은 다양한 채널을 통한 마을 홍보,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활동 및 마을내 공동체 강화 및 주민 정보화 교육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최우수마을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행사에서는 우수 마을의 성공사례 발표와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세무·회계 특강, 정보화마을 리더십 역량 강화 강의, 마을 간 화합의시간 등 정보화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장영환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2017주년을 맞은 정보화마을이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춰 한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마을관계자 모두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이낙연 총리 "평창 北 참가 노력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남북 화해와 협력을 말하기에 어색한 국면이기는 하지만 얼음 밑에서도 강물은 흐르는 것처럼 체육활동을 통한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의 유지는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무서출청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지원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를 다시 한 번 제안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역대 최고의 동계올림픽으로 만들어줄 것

을 당부하면서 국민적 관심 고조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국민의 관심 고조가 이제는 절실해지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은 이미 88서울올림픽이나 2002년 월드컵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도 성공시켜 줄 것이라고 믿지만 그 때 못지않은 뜨거운 열기가 지금부터는 예열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또 "스포츠와 올림픽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도 중요하다"며 "최근 K스포츠 재단 스캔들로 체육지원단체와 기업들의 많은 위축이 감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는 것

은 우리가 청산하고자 하는 것은 정경유착이나 체육마저도 사적이익 추구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했던 왜곡된 행태를 청산하려는 것이지 체육을 진흥하고 체육 꿈나무를 육성하는 그런 일들을 위한 기업들의 지원까지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오히려 그것은 더욱더 권장 받아야 할 일"이라며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국민 속에 뿌리를 내리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민기업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며 "공공기관 또한 올림픽 후원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통해서 공익에 기여하는 노력을 해줄 때가 됐다"고 진단했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